

데스크칼럼

결국 무위로 끝난 '개헌'

양동민

정치부장



5·18 정신 등을 헌법전문에 새기려던 개헌추진이 없던 일이 됐다. 참으로 안타깝다.

5·18광주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은 광주·전남지역에서 오랜 기간 요구해 온 숙원이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여야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며 논의의 물꼬를 뒀고, 최근 정치적 변곡점을 거치며 추진력을 얻었다.

하지만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 동시진행을 목표로한 39년 만의 개헌 추진은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열어 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원내 6당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발의한 개헌안을 상정했다.

이번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헌법 제명의 한글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민주이념 전문 수록, 계엄에 국회 통제 강화,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 등이 담겼다.

1987년 6월 항쟁의 결실로 제정된 현행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와 헌법재판소 도입 등 민주화의 큰 진전을 담보했다.

그리고 3·1운동과 4·19혁명을 담고 있다.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적었다. 여기엔 1960년 4월과 1987년 6월 사이 중간 고리가 빠졌다는 여

론도 비등했다.

그 사이 3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이 기간 대한민국 사회는 완전히 달라졌다. 권력 구조 논쟁은 차치하더라도 계엄 통제 문제와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적 명시 같은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 과제가 됐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뒤늦게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기는 개헌을 추진했다.

개헌에 대한 여론도 긍정적이었다.

앨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8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전국 지표조사(NBS)를 한 결과, 개헌 국민투표를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61%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3%, 모름·무응답은 16%였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러나 반대 당론을 내건 국민의힘 의원 전원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처리가 무산됐다.

개헌안 표결 결과 178명이 투표에 참여하면서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다. '부결'도 아닌 '투표 불성립'으로 끝났다. 이를 낱인 8일에도 국힘은 개헌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렇게 오래된 헌법을 바꾸려는 시도는 또다시 없던 일이 됐다.

모처럼 맞은 기회를 건어차버린 정치적 행태에 그저 씁쓸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반복해서 말했듯이 국회의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안전에 반대한다면 반대표를 행사하면 됐다.

이번 개헌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 만

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면 통과되기 어려운 구조 속에 상정됐다.

광역단체장 출마 등으로 일부 의원들이 사직한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86명으로 개헌안 가결에는 191명의 찬성표가 필요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최소 12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했다. 정치적으로도, 수적으로도 국민의힘은 충분히 개헌안 통과를 막을 수 있었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이에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과거 국힘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아직도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군 특수부대가 남파돼 폭격한 폭동이라는 극우적 입장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종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게다가 일각에선 국힘의 반대 이유가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동시에 진행되면, 개헌을 원하는 국민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오고 이는 곧 지방선거가 여론에 유리하게 흘러갈까 우려한 때문이라는 말도 떠돈다.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을 앞두고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기대했던 광주·전남지역민은 실망을 넘어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는 실제로 12·3 비상계엄이라는 충격적 사건을 겪었다. 여전히 5·18에 대한 왜곡·폄해는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이후 개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정치 환경이 조성될지도 불투명하다.

이번 개헌 추진은 제동이 걸렸지만, 개헌 논의가 이대로 끝을 내서는 안된다. 개헌은 단기적 정치 지형이나 유불리를 넘어 국가 대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중대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해야 할 일로만 남겨놔서는 안 될 것이다.

기고

복지 현장 '환경케어' 기술의 시작

김민정

한국공기안전원
교육·인증센터 연구원



실내 공기질 (IAQ·Indoor Air Quality)은 노인복지시설의 핵심 안전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연환기와 탈취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한계를 구조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공기안전유지관리사 자격 취득 및 관련 교육 이수 등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

돌봄의 개념이 빠르게 확장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식사·위생·투약·정서 지원을 넘어, 이제는 건축물 자체의 공기정화 능력을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공기안전유지관리사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점이다.

고령자 특유의 체취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다. 노화로 인해 생성되는 피지 산화물 그리고 공기 중에 부유하는 미세 각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다.

일반 가정을 공기청정기나 단순 환기만으로는 이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어렵다. 방향제나 탈취제는 냄새를 덮는 방식일 뿐이다. 방향제, 탈취제의 과한 사용은 화학 성분과 쉽게 노출되며 함으로 오히려 고령 노약자의 호흡기와 피부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돌봄 전문가는 더 이상 냄새를 참고 감내하는 사람이

아니다. 또한 방향제나 탈취제로 문제를 '덮는' 역할에 머물러서 안 된다. 이제는 악취와 오염의 발생 구조를 분석하고, 근본 원인을 제거하며, 재발이 있는 건축물의 실내 공기질 (IAQ)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문 직무 역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고령 노약자, 면역 취약 계층이 생활하는 요양시설, 주간보호센터,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공간에서는 공기 관리가 단순한 쾌적성 문제가 아니라 건강·감염·존엄·시설 경쟁력과 직결된다.

돌봄 시설 내에서 실내 공기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면 마주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다분하다. 입소자와 보호자의 신뢰도 상승, 보호시설 이미지 개선, 쾌적성에 대한 객관적 관리 체계 구축, 민원·악취 관련 분쟁 감소 등을 기대해볼 수 있다.

냄새 없는 공간은 곧 존중받는 공간이다. 공기안전유지관리 역량은 어르신 삶의 질을 구조적으로 끌어올리는 핵심 도구다. 이제는 요양, 복지 전문가를 넘어 환경 케어를 수행하는 차별화된 복지 전문가로서 새로운 도약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다.

고령화가 가속 될수록 실내 환경의 질은 노인복지의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돌봄의 범위는 신체적·정서적 영역을 넘어 실내 공기 환경 안전까지 확장되고 있다. 공기안전유지관리사 자격은 복지 전문가의 차별화된 경쟁력과 복지 현장의 새로운 직무 영역 개척 및 개인 커리어 고도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운영 측면에서의 비용 절감과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

고령화에 따라 복지시설 간 경쟁은 심화된다. 시설 입소에 있어서도 보호자에게 신뢰 지표가 될 수 있다.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공기정화시스템 점검과 이에 대한 지식을 갖춘 돌봄 인력이 배치된 시설은 명확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공기안전유지관리사 자격은 개인에게 다음과 같은 가치를 제공한다. 차별화된 전문성 확보, 교육·컨설팅 영역으로의 확장 가능성, 직무 안정성과 협상력 강화 이는 단순 자격 취득이 아니라, 전문 직무로의 변화를 기대해볼 수 있다.

고령자는 면역력이 약해 호흡기 질환과 감염병에 취약하다. 실내 기압을 외부보다 +5~10Pa 높게 유지하는 양압 환기 시스템은 외부 오염물질 유입을 구조적으로 차단한다. 또한 고성능 공기정화 장치는 극초미세입자와 바이러스성 입자를 제거해 감염 위험을 낮춘다. 이는 단순 위생 관리가 아니라, 공기 중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을 방지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의 일부다.

건축물 자체의 공기 정화능력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노약자 이용시설의 방역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핵심 인프라가 된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현 시점에서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단순 돌봄 제공을 넘어 것을 넘어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전문성 확보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실내 공기 감염 예방과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해 시설의 신뢰를 높이는 전문적 책임의 확장이다.

취재수첩

'한숨'보다 '웃음' 많은 가정의 달 되길

윤용성
산업부 기자



어린이날부터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 기념일이 가득해야 할 가정의 달 5월, 각 가정에서는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선물과 외식 등 지출이 많은데 고환율, 고물가까지 덮치면서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호남지방데이터팀이 최근 발표한 '2026년 4월 광주와 전남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4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다.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되는 생활물가지수는 2.8% 오르며 전체 물가 상승률을 상회했다.

전남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24년 7월(2.9%) 이후 1년 9개월(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보다 3.4% 오르며 지난 2024년 5월(3.5%) 이후 2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경기 불황 속 최근 중등 경제 장기화로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민생경제 전반에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면서 서민 삶은 더 힘들어지고 있다.

물가는 서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경제 문제다. 정부가 가정의 달을 맞아 가공식품과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확대하고 석유 최고가격제로 상승 폭 제한 조치 등으로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국제유가와 환율, 지정학적 리스크가 얽힌 인플레이션을 일회성 행사와 가격 규제로 막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민생 경제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물가 관리 체계를 재점검해야 할 때다.

정부와 지자체는 중등 경제에 맞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민생물가 대응책을 마련해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사설

통합특별시 방산클러스터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전 세계 방위산업은 미국-이란전쟁 등 국제 정세 불안과 각국의 국방 예산 증가로 수요가 날로 커지고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센터에 따르면 세계 국방비는 2014년 1조7760달러에서 지난 2023년 2조4430억달러로 10년 새 38%가 늘었다.

이런 흐름을 타고 2020년 30억달러 수준이던 우리나라 방위산업체 수출은 2021년 73억달러, 2022년 173억달러, 2023년 130억달러로 급증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을 이끌고 있는 곳이 방산 클러스터다. 이는 방위산업과 클러스터(집적)를 결합한 말로 방산 관련 기업·연구소·기관·군부대 등이 한 지역에 집중돼 상호·협력하며 생태계를 형성하는 구조를 말한다.

이런 방산 클러스터에 광주·전남이 도전장을 던졌다.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 먹거리로 이를 전면에 내세우며 생태계 구축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방위사업청 주관 아래 국방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신규 공모 증인데 현재 광주, 전남 등 8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했다. 7월께 이들 중 3~4개 지역이 선정된다.

광주는 인공지능(AI)과 광융합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무기체계와 감시·정찰 기술을 중심으로 한 첨단 방산 구조로의 전환을 내세우며 공모에 뛰어들었다.

광융합산업 집적단지용 기반으로 국방 반도체의 설계부터 제조, 패키징까지 전 공정을 지역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게 강점이다. 또 반도체와 연계된 센서, 화합물반도체 분야로의 확장 가능성 등 기술 기반 경쟁력도 뛰어나고 관련 조례도 제정돼 있다.

전남은 우주항공과 소재부품 산업을 결합한 '우주 방산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들고 참여했다.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고흥을 중심으로 한 발사체 산업과 순천의 첨단 소재부품 산업을 연계해 우주 기반 방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조례 제정, 순천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국방과학연구소 등과 협의체 구성 등 공모 대응 체계도 갖췄다.

방산클러스터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 취약한 광주·전남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한다.

광주 부동산시장 침체 심화...반등도 요원

광주 부동산시장 침체가 심화해 심상치 않다. 아파트는 하락거래가 멈추지 않고 있고 상가와 오피스 공실률도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과 '2026년 1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보면 그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광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평균 0.15% 하락했다.

그 중 동구가 지산·산수동 주요단지 위주로 0.27% 떨어졌고, 북구는 연제·용봉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남구는 백운·방림동 대단지 위주로 각각 0.20%씩 하락했다.

광주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2월 2일 이후 13주 연속 하락하는 등 울타 0.76% 추락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넷째 주 0.01% 올라간 것이 마지막으로 상승한 것이다.

그나마 지난 3월까지 마이너스를 보이던 전남 아파트 매매가격은 4월 들어 오름세가 계속되면서 울타 0.10% 올랐다.

광주·전남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침체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현재 광주 오피스 공실률은 18.9%, 전남은 22.8%로 모두 전국 평균(8.8%)의 두 배를 웃돌고 있다.

이는 전남의 경우 충북(29.9%), 경북(23.6%)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고 광주 역시 광역시 중 최고다.

일반상가 공실률도 광주 15.7%, 전남 13.6%로 전국 평균(13.1%)을 넘어섰고 소규모 상가 공실률 역시 광주 9.5%, 전남 10.6%로 전국 평균(8.3%)보다 높다.

이 때문에 임대료 약세와 투자 수익 부진도 계속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아파트는 미분양 해소가 더더 급매물 위주 거래가 집중되고 있고 오피스와 상가는 지역 경기 둔화와 소비 감소, 온라인 중심 소비 패턴 변화가 지방 상권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문제는 인구 유출 등이 여기에 맞물리면서 이제 단순 경기 회복만으로는 부동산 침체를 반등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앞으로도 장기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지역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아파트 미분양 해소책 마련과 함께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 시행 등이 절실하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이재진	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정치부 370-7040 경제부 370-7020 산업부 370-7010 사회부 370-7030 문화체육부 370-7234	논설실 370-7200 임원실 370-7000 총무국 370-7093 사입국 370-7090 광고국 370-707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간)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드림투데이와 기사 제휴를 체결합니다. 기사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gwangnam.co.kr)와 드림투데이(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